

주부·老人 人力 활용 추진

時間制 고용 지침 마련

工團지역에 시범택아소 확대

산업부는 인력난을 덜기 위해 주부·노장(年長)·재소자의 유류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.

4일 산업부가 추진키로 한 유류인력활용방안에 따르면 ▲시간제(파트타임) 고용을 추진키 위해 고용지침을 제정하고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파트타임고용을 시키는데 관심을 높이고, 관련법령의 정비를 완료해 파트타임제의 활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.

또 주부취업에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되는 택아시설확충을 위해 ▲전국 택아시설에 시범택아소시설을 1천명 이상인 사업장에 택아시설을 의무화하고 ▲중소·영세기업의 공동운영하는 직장택아시설을 지을 때는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.

또 직업인을 함께 돌봐야 하는 주부의 입장을 감안, 94년까지 저소득지역에 30개의 아파트형공장 등을 짓고 일제비밀직업인 지역주민을 의무고용토록 하며 주부취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.

한편 중장년층의 인력활용을 위해 ▲대기업체 정년퇴직기술자를 중소기업체로 파견, 기술훈련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▲중장기적으로 중장년층 전담 취업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.

한편 재소자의 산업인력화를 위해 ▲교도소내 외부 직원훈련원의 설치확대방안을 강구하고 ▲교도소내 위탁공장을 늘리며 ▲현재 2개교도소 4개업체가 실시하는 외부통근작업을 내년중 10개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.

산업부는 앞으로 노동부·보사부·법무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.